

“올 겨울 정전을 막아라”

전력계통 운영을 30년 넘게 해본 은퇴자들이 전력거래소 중앙급전소 요원으로 투입된다. 경력 10년 이상의 기상 분석·예보 전문가도 동절기인 5일 이전까지 계약직 형태로 거래소에 특별채용된다.

중앙급전소는 거래소 이사장 직속기구인 ‘중앙전력 관제센터’로 개편된다. 새로 개발·시험 중인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현장에 즉시 적용된다.

전력거래소(이사장 남호기)는 겨울철 전력수급난을 앞두고 이런 내용의 특별 종합대책을 수립, 지난달 21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에서 마련한 관련 개선방안과 별도로, 계통운영요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만든 것이라고 전력거래소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계통운영능력 향상에 초점을 둔 1차 대책을 12월 5일까지 추진기로 했다. 은퇴자 중용, 기상전문가 특채, 기구개편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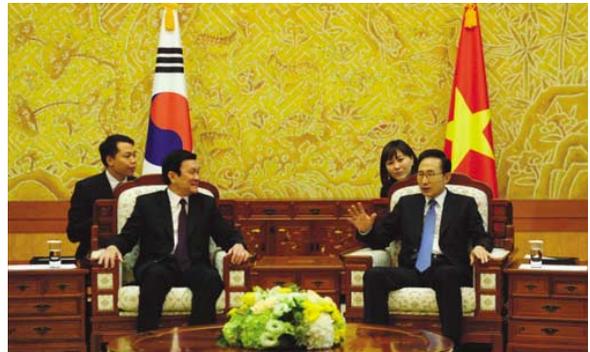
전력거래소는 이와 함께 급전소 요원의 전문성을 가능한 빨리 확보키 위한 2차 대책도 마련했다. 계통운영 요원에 대한 전문원 제도 신설, 국제자격인증제도 도입, 발전·송변전 교육 강화 등이 여기에 속한다.

베트남 원자력발전소 受注 청신호

베트남 원자력발전소 수주(受注)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쓰엉 썬 상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이날회담에서 한국의 기술을 적용한 원전 개발, 원전 인력 양성, 그리고 기술 이전 등 한국 측 제안을 바탕으로 향후 후속협력 사업을 추진기로 했다.

두 정상이 '한국의 기술을 적용한 원전 개발'에 기본적인 합의를 한 데 대해, 청와대는 베트남 원전 수주의 첫발을 뗐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총 10기의 원전 건설을 계획 중이며, 이 가운데 1,2호기는 러시아, 3,4호기는 일본이 수주를 확정했다.

우리는 빠르면 내년 말쯤 계약이 체결될 베트남 원전 5,6호기 수주를 노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말 UAE (아랍에미리트) 원전 4기의 건설·운영 사업을 수주(총 400억 달러)하며 선진국이 독점해 온 원전 수출국 대열에 합류했다.

양국은 한국형 원전 건설에 필요한 세부 조건을 담은 연구보고서인 '원전건설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후속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식경제부, '홍석우 신임 장관 취임식'

지경부는 지난달 17일 윤상직 1차관과 김정관 2차관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이수원 특허청장 등 본부 전직원과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기술표준원, 우정사업본부 과장급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제 56대 홍석우 장관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홍 장관은 '1조 달러 행정, 2조 달러 정책 추진'을 재임기간 역점 목표로 제시했다.

1조 달러 행정은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나라의 공무원다운 행동을 하는 것이고, 2조 달러 정책은 가급적 무역 2조 달러를 빨리 달성할 수 있는 큰 틀의 정책을 펴자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중장기적 산업에너지정책 ▲업무의 시스템적 추진 ▲정책 인프라의 구축 ▲실패를 미래자산으로 여기는 R&D정책 ▲전문 중소 중견기업 육성 ▲신성장동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해 중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산정기준 이번달부터 바뀐다

• 한전 전기공급 약관 개정

전력을 공급받는 고객의 기본요금 등 전기 요금 산정 방식이 바뀐다.

지난달 29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에 따르면 개정된 전기공급 약관이 이번 달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고압 고객의 기본요금 산정기준이 여름철(7~9월) 최대수요전력뿐 아니라 겨울철(12~2월) 최대수요전력에도 연계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은 검침 당일 직전 7~9월 혹은 당월 중 최대수요 전력을 적용해 기본요금이 계산되지만, 약관 개정에 따라 직전 12~2월 최대수요전력까지 고려해 기본요금을 계산하게 된다. 저압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고객이 계약 전력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부과되는 부가금 계산 방식도 바뀐다. 지금은 계약전력 대비 450시간을 초과 사용할 경우 초과 사용량에 대해 150%의 부과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만, 2회 이상 초과할 경우 150%, 4회 이상 초과할 경우 200%, 6회 이상 초과할 경우 250% 등으로 초과 횟수에 따라 부과율이 차등 적용된다.

다만 최대수요전력 계량이 가능한 계량기를 보유한 저압 고객은 초과전력(당월 최대수요에서 계약전력을 뺀 수치)에 대해 부가금 250%가 부과된다.

이밖에 고객이 해지 요청을 하고 1년 이내 재사용할 경우 해지 기간에 대해 기본요금이 적용되고 요금 미납으로 해지된 뒤 재사용할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해지 사유와 관계없이 처음 1회 재사용에 한해 기본요금 부과를 보류하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1년 이내 해지·재사용을 반복하는 고객에게는 부과가 보류된 기본요금까지 포함해 요금이 부과된다.



10조 2천억 원 투입 서남해에 2.5GW 해상풍력단지 구축

전북 부안 위도에서 영광 안마도 해상에 오는 2019년까지 총 2.5GW 규모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구축된다.

이 사업에는 정부와 전남, 전북도, 한국전력과 발전사 등 7개 전력공기업과 대우조선해양, 두산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고 총 10조 2000억 원이 투입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11일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남해 2.5GW해상 풍력 종합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발전회사 및 풍력설비개발사가 참여한 가운데 협약식을 열었다.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프로젝트는 2020년까지 세계 3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아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가 함께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작년 11월 사업 추진 로드맵이 처음 발표된 바 있다.

종합추진계획에 따르면 2019년까지 3단계로 나눠 총 2.5GW(2500MW)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는데 정부 예산 290억 원을 포함해 약 10조 2천억 원이 투입된다.

2014년까지 100MW 규모의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1단계 사업에 4000억 원, 2016년까지 400MW 규모의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2단계 사업에 1조 6000억 원이 투입되며, 8조 1934억 원을 투자해 2019년까지 2000MW 규모의 단지를 추가로 건설하게 된다.

정부는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통해 2020년까지 누적 매출 42조 4000억 원을 올리고, 약 7만 6000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EA